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1시30분~3시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초대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서민금융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여러 논의는 많았습지만 현재까지 획기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그동안 대부업 광고반대운동, 악성채권소각운동등을 펼쳐왔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체계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서민과 수요자 중심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안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 주 제 :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회-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시 간	내 용
13:00 ~ 13:30	등록
13:30 ~ 13:40	인사말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13:40 ~ 14:20	발제1 :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안 평가와 제안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발제2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문제점과 대안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
14:20 ~ 15:20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토론자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숙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상담실장)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안종식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준하 (희망살림 팀장)
15:20 ~ 15:30	종합토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정의연대 / (사)금융소비자연맹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녹색소비자연대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에듀머니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한국YMCA전국연맹 /
희망살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시민금융총괄기구 중심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¹⁾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은행들의 리스크 강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었고, 서민금융인 저축은행 등이 부실증가로 제 역할을 못하자 제도금융권 이용인 어려운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을 비롯한 사금융 이용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서민들에게 금융을 지원하였으나 유사한 상품들이 업권별 금융사별로 취급되어 수요자가 금융사별로 찾아 다녀야 했고, 금융사들의 양적 목표 달성 채우기 대출, 신용보증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하여 금융지원이 위축되고 대위변제율도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한다하나 통합되는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채권자 중심적이며 취급하는 업무도 통합 대상기관의 업무 기능을 통합하여 일부 보강하고 조정 재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총괄기구 추진 배경

서민들에게 저리의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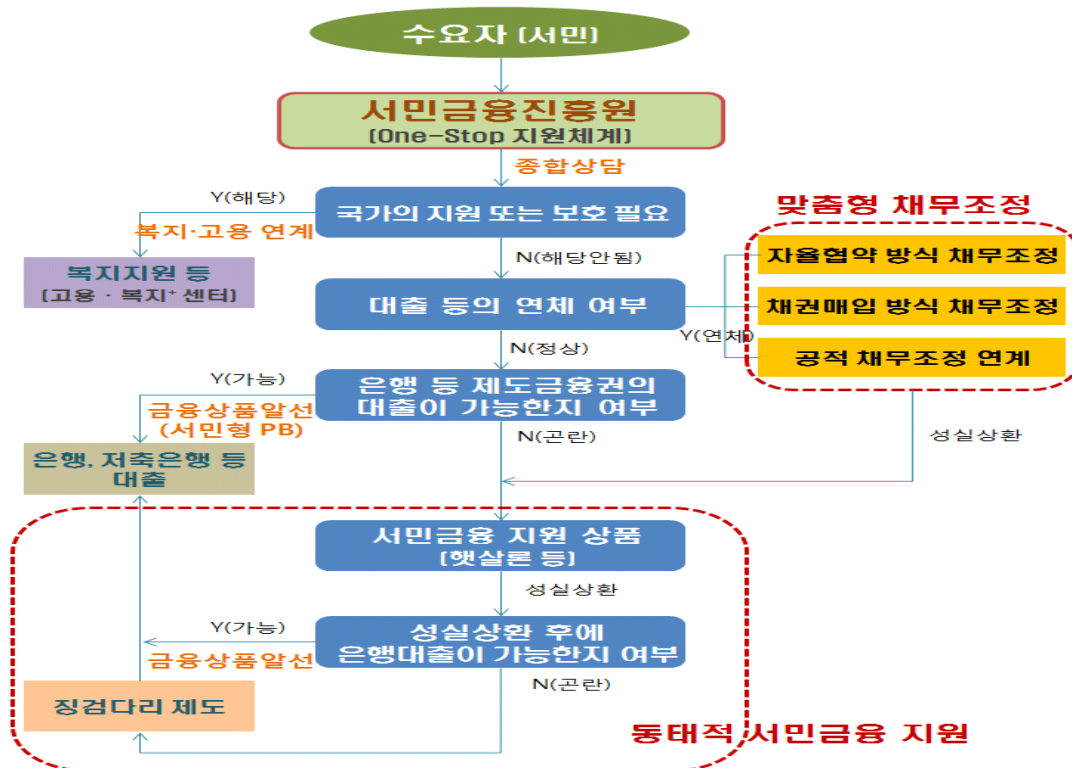
1) 본 발표내용은 발표자 개인의견이며 금융소비자연맹과 무관합니다.

- 유사 상품들이 권역별로 각각 공급됨에 따라 수요자 혼란·불편 초래
-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에 치중
- 특정 금리대와 특정 용도에 한정
- 개인 보증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높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자율협약방식의 채무조정

2. 기본 방향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 지원.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주거 등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알선하고,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탄력적 공급과 서민금융 자금지원 이용 후 제도금융권 안착을 위한 동태적 서민금융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상시화.



3. 설립근거 및 목적

가. 법적 근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기구

나. 목적

-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 운용
- 서민의 원활한 자금조달,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등 금융생활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전과 경제 ·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4. 피통합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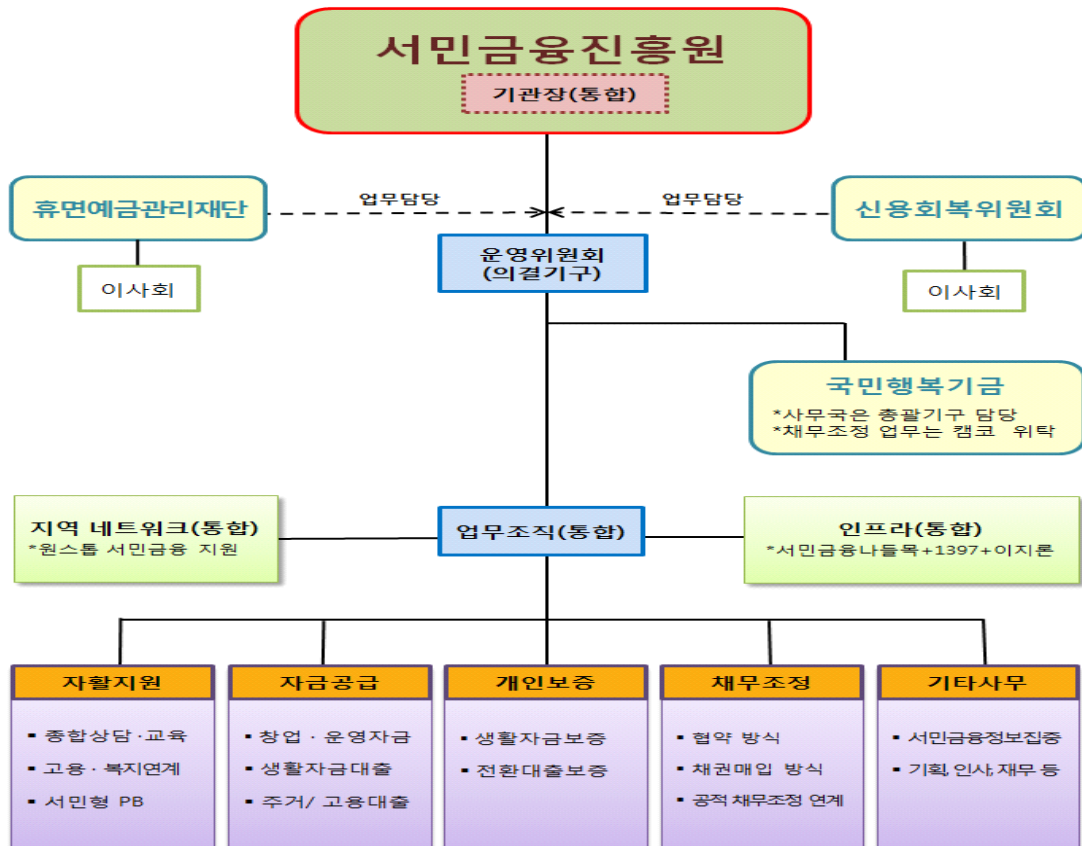
서민총괄기구는 독창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 기관이 하고 있던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관련업무는 캠프 위탁
- 한국이치론
- 캠프의 서민금융 관련 인프라(서민금융 나들목, 콜센터)와 서민금융 업무(취업, 창업알선, 소액대출 등)

5. 서민금융총괄기구

- 기관명을 서민금융진흥원이라 명칭하고 금융사,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프 등)이 출자하여 자본금 5천억원 ~ 1조원의 특수법인인 민간기구로 출범
-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
- 진흥원 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임.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로 존치
-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모든 업무를 통합 담당
 - 사무조직을 담당업무별로 통합하여 구성 · 운영

가. 서민금융 총괄기구 조직도(안)



나. 위원회의 구성

구분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진흥원의 부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법무부장관, 노동고용부장관, 한국소비자원 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자산관리공사 사장 추천을 받은 자 각각 1명 -민간전문가 1명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이사 -서민금융부원장 -민간전문가

6. 조직 검토와 제언

가. 통합 효과 저하

업무 기능이 다른 기관들을 인위적으로 하나로 통합 집중하여 사무조직을 기존 업무별로 통합 구성 운영하고, 업무 성격상 조직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워 통합 효과가 낮을 수 있고,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업무 특성상 거대 관료 조직으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고, 지배구조의 변화, 인적 융합, 지원 내용 변화 없이는 기존 서민금융 지원 체계와 다를 바 없는 거대한 공적인 기구가 탄생 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음.

나.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 심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휴면관리예금재단의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모든 업무는 진흥원이 통합해 담당하고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존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과 채무조정까지 담당하게 되는 권한 집중이 발생하고, 지배구조에 민간전문가에 참여하나 극히 일부로 중립적인 지배구조로 구성되지 않는 한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이 심화될 여지가 있음.

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진흥원 임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압력이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매카니즘이 있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진흥원 이사회 인적 구성 다변화를 강제하여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라.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휴면관리예금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위는 진흥원의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은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업무이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신복위의 역할은 진흥원에서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금융사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으로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개편하여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여 소비자 대표 민간전문가 등도 위원 구성에 참여시킨다 하나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채권자, 채무자와 별개로 제3자적 지위로 법무부 등 행정부 관료를 추가할 필요도 있음.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인적 구성을 다변화해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II.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고찰

1. 서민금융상품 지원 현황

서민금융상품은 상품의 취급자, 유형별로 다음과 지원함.

-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에서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1조.2천억 지원
- 햇살론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생활안전자금 등으로 5조원 지원
-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으로 6조1천억원을 지원
-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주는 대출로 2조 2천억을 지원

구분		①미소금융('14.4)	②햇살론('14.4)	③새희망홀씨('14.4)	④바꿔드림론('14.4)
대출 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6~10등급(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6~10등급(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6~10등급(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12% 이하 (보증료 1% 포함)	연 12% 이하	연 12% 이하 (은행이자5.5%+ 보증료) ※11.12부터 0.5% 인하
취급 기관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대출 한도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전환한도) ※13.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원까지 확대
대출 실적누계	기간	'08.7월 ~ '14.4.30	'10.7.26 ~ '14.4.30	'10.11.8 ~ '14.4.30	'08.12.18 ~ '14.4.30
	금액	12,184억원	50,169억원	61,228억원	21,798억원
	건수	131,348건	561,381건	652,113건	205,697건

* 금융위원회 2014.7.16

2. 기존 금융지원의 문제점

유사한 서민금융상품이 재원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사가 다르고, 업권별 신용등급 평가가 달라 동일인임에도 지원여부가 달라 질 수 있어 소비자가 금융사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고,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실적에 쫓겨 양적 목표 채우기 대출을 하고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하여 개인 보증 상품인 바뀐드림론,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높았음.

3. 금융지원 방향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제로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을 서민들의 고용, 주거, 재난피해자의 생활지원까지 확대하며 지원 대상별로 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상품을 다양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지원

은행의 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금다리 제도로 개편하여 동태적 서민금융으로 지원하고 미소금융은 상품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겠다 하나 명칭만 일원화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기지원 내용과 대등 소이함.

서민금융상품에서 서민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자로 고용이나 소득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금융지원은 부채만 증가시키고, 자격 조건 미달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자는 고리의 대부업체·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4. 제안사항

가. 자금용도별 명칭 사용

서민금융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유형과 자금용도에 따라 햇살론 1,2,3,4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존 상품들을 명칭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햇살론은 돈이 없거나 빚에 찌든 서민에게 햇살 같은 따뜻함과 희망을 준다는 시혜적인 의미가 강함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가 용이한 자금용도별로 구분하여 생활안전자금, 고용·주거지원자금, 저금리전환대출 등의 명칭 사용이 바람직함.

나. 지원 다양화

자격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병원비, 등록금 등과 같은 긴급자금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자금지원을 한 번에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게 하고 채무자와 관계 형성이 되고, 정보가 수집되어 자활 프로그램에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상환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에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조건을 다양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함.

다. 연체 적용 완화

지원금액, 자금용도,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채무자별로 대출이자, 원리금 등을 매월 납입 외에 2개월, 3개월 등 납입 월을 다양화하고,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연체로 인한 급격한 금리 상승에 의한 상환 의욕 상실을 예방해야 함.

라. 최저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

대위변제율이 높은 개인 보증상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채무자의 부채상황이나 상품종류에 따라 보증비율을 85% ~ 95% 조정시 취급 금융사도 그 만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지원 심사를 강화할 경우 지원이 적실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 지원 금액별로 보증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최저 지원금 등 일정한 금액이하는 100% 보증해야 함.

마. 서민금융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자가 재차 정책상품을 신청할 경우 징검다리 상품으로 지원하고 이를 성실히 완제한 후 추가대출을 원하면 은행의 신용대출상품으로 유도한다하나 강제성이 없고, 금융사는 영리추구를 하는 상법상 법인으로 현 신용등급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서민금융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금융대출금이 총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야 함.

III.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지원 현황

사적 채무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신용회복을 지원함.

○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이상 장기연체자 26만명에게 채무조정
(채무원금 2조 9천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로 단기 연체자 119만명에게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 61.5만건(2004년 ~), 개인파산 85.6만건(2002년~)

구분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프리워크아웃) 금융회사 채무불이행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총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30~50% 감면(특수채무자 60%, 70%) * 재산 있는 경우는 재산 회수가 반영	○ (개인워크아웃) 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50%·매입채권 30% 원금 감면(특수채무자 60~70%) * 담보채권은 연체이자만 감면 ○ (프리워크아웃) 원금 및 이자 감면 無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 기간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기간	'13.4월 ~ '14.4월말	'02년 ~ '14.4월말
	실적	26.1만명	119만명 (개인워크아웃) 112만명, (프리워크아웃) 6.8만명

* 금융위원회 (2014.7.16)

2. 기존 채무조정의 문제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인 금융사의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협약 미가입 채권자의 채무는 배제되어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권에 따라 일회성 한시적으로 하여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속적인 채무조정의 필요.

3. 채무조정 방향

확실적인 대규모 채무조정 보다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상시화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 감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무조정하고, 공사적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하나 이는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되고, 민간단체의 채무조정 · 상담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임,

4. 제 안 사 항

가. 채무자 협상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과 상환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채무조정하는 것은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으로 먼저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채권 감면율, 상환방식 등에 대한 협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야 진정한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이 가능함.

나. 채무조정 상담기구 다양화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중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 채무조정

으로 연계하고, 법원도 개인회생 신청자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채무조정 전문기관으로 회부하는 내용 관련 법률안(개인회생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 마련 중에 있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강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상담 기구 다양화에 역행하는 것임.

다. 채권 소멸 우선

채무자가 빚을 안 갚는다고 도덕적 해이자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채권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채권 소멸시효(5년) 전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적채무조정으로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할 것이 아니라 채권을 소멸시켜야 함.

IV. 맺음 말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여 금융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 하지만 금융을 이용하여 자활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서민금융지원을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자 뿐만 아니라 지원하면 자활이 가능한 무자격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도 일정한 룰을 정해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협상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도덕적 해이자고 질타하기 전에 채권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채무조정 ·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계해야 한다.

금융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 내지는 사회보장정책과 연계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제약활을 하지 못하고, 전금융사들이 채권자 중심의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수 많은 금융소외 계층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정책 서민금융이 금융사의 서민금융 역할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금융사들이 양산해 내는 금융소외 계층을 다 떠안을 수 없으므로 서민금융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들이 스스로 금융지원을 하고,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서민금융이 수요자 중심의 서민 친화적인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총괄기구의 지배구조, 업무 등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문제점과 대안

백주선(민변 민생위 금융팀장, 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2004년 2분기 자금순환동향표(잠정)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²⁾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218조 원이던 것이 쉽게 증가하여 1,242조 원(6개월 사이 24조 원 증가)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가계 부채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은 1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3%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이 비율이 127%일 때 서브프라임(비우량 담보대출) 위기가 발생했고 현재는 다소 줄어 115%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수많은 가계에 원리금 상환의 고통을 주고 있고 한국 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위험요소인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비되는 가계소득의 정체 아래, 신용카드 장려 정책, 대부업 양성화, 금융기관에 고금리 대출 합법화, 주택담보대출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그 양적 규모와 질적 양상이 모두 한국 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과중한 가계부채는 그 규모 자체도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압박이 되지만, 최근의 급격한 양정 증가양상 및 2금융권 대출의 증가에서 보는 질적 악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튀게 될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과중한 경우에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1천조원의 훨씬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던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점점 금리인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2)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³⁾

2.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의 개요⁴⁾

가. 법률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1조)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재단법’)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법률 제23조)

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 (법률 제24조, 제27조, 제29조)

라.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법률 제30조)

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 제35조, 제37조, 제40조~43조, 제52조)

바.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 통합(법률 제8조, 제9조, 제27조, 제33조)

3. 문제점 및 대안

가. 서민금융기능 독점의 문제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의 서민금융기능을 하나의 기구에서 총괄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서민금융 영역에서 독점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독점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책금융인 서민금융을 이용하게 될 때 하나의 독점기업을 상대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지위는 매우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기능을 모두 서민금융총괄기구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이 필요한 서민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지 않고는 서민금융을 조달할 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기구들이 서민금융상품으로 경쟁하는 것이 수요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러 기관이 소비자를 위하여 경쟁하는 서민금융이 서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기관을 도태시키고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을 육성하면 자연적으

3) 이현욱,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 토론문,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4. 10. 30.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아닌한바 여기서 이만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 대응 방안’과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위 토론문을 참고하세요.

4)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관련 근거법률 마련’ 제하 금융위원회 2014. 7. 22.자 보도자료 참고

로 서민금융이 활성화됩니다.

채무조정 기관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하여 하나의 기관이 채무조정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무조정은 우선 공적채무조정절차인 법원을 통한 파산·개인회생절차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여러 사적인 채무조정기관이 경쟁하면서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자들에게 10년이라는 변제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신청자의 1/3이 탈락하는 지경인바 먼저 이에 대한 성찰과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 통합의 문제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서민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금융은 발생단계, 부실로 인한 추심단계, 채무조정단계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발생단계와 부실로 인한 추심단계는 금융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채무조정단계는 금융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영역에 가깝습니다.

서민금융은 그것이 정책금융이고 서민을 위하는 일하고 하더라도 금융인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잘 평가해 보고 적절한 신용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부실이 최소한으로 벌어지도록 관리하고 부실채권이 생기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이미 부실화된 채권을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탕감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새출발을 위하여 기존의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탕감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금융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복지의 영역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채무조정을 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빚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기꺼이 탕감되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극명한 철학의 차이는 금융의 역할과 채무조정의 역할을 하나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은 각각 별도의 기관에서 맡아야 합니다.

다. 채무조정전문기관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크게 보면 금융권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큰 기구입니다(무엇보다 원장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감사마저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채무자가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최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충족하려고 할 것이고 위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만 법원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신용회복지원회의의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관할하는 개인회생·파산 정도에 버금가는 요건과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원에서 관할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버금가는 요건과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들이 사적 채무조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라. 입법방식의 문제점

정부(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재단법을 전부 개정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내용, 서민금융진흥원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은 유기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꼭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 각각 별도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은행연합회장이 도산법원장을 겸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생명보험회사협회 회장, 손해보험회사협회 회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등 8명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측이거나 금융기관에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채무조정기능을 담당할 기관의 구성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채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된 채무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채무자의 처지에서 의견을 개진할 위원들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 선임시 정당, 지자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성

1) 주식회사를 준용하도록 한 점

추후 배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민금융기능만 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것이라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보다는 출연을, 출연 주체는 금융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국가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데, 진흥원의 부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 중 1명과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서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처지를 대변할 만한 사람은 위원 1~2명 정도인 반면 절대 다수가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서민금융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

고, 부원장,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명칭과는 달리 철저하게 금융기관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큼니다.

채무자의 처지에서 운영에 관여할 위원의 수를 최소한 금융기관측 인사의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서민금융진흥원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도 두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과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관의 변경,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진흥원의 예산의 편성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의문이고,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든 이사회든 하나로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 주주총회와 같은 권한사항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상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만합니다.

4. 나오며 : 정책제언

서민금융기능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여러 기관이 경쟁하면서 서민친화적이면서 부실이 적은 서민금융상품이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의 상담편의를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기능은 금융위가 주도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처지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거나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채무조정활동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배드뱅크의 역할에 충실하게 채권을 매입·보

유하면서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거나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채무 조정활동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 소관 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안정행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같이 참여하는 범 부처 기구로 만들고 기능도 직접 서민금융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을 시행하기 보다는 정책협의기구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⁵⁾

5) 이현욱,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 토론문,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4. 10. 30.

지정토론

좌장 :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토론자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숙 (민생연대 상담실장)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안종식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준하 (희망살림 팀장)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민금융총괄기구 중심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은 현재 운영주체가 다르며 재원이 상이함. 미소금융의 재원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이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관리하고 있음. 햇살론은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출연하여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에 제공되고 있음. 국민행복기금의 바퀴드림론은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회복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을 이용하여 은행 등이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책성 서민금융은 민간재원을 이용하며 운영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이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은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금융서비스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서민들에게 이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원스탑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임.

정책성 서민금융제공 주체와 관련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은 이름과 달리 대부분 민간재원을 이용하여 상업적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순수 정책금융과 달리 일정부분 상업성을 고려하여 제공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정책성 서민금융이 만들어진 배경은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 있으며, 역설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을 구축하는 부작용도 있음. 따라서 정책성 서민금융은 향후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제 역할을 강화하면서 축소되어야 할 것임. 반면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과 같은 대출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이용한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문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자금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의 건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반면, 채무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건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서민금융총괄기구의 경우 스스로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대상은 자신의 관리 대상인 정책성 서민금융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매우 중요할 것임.

서민금융총괄기구와 제공하는 정책성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정책성 서민금융은 병원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서민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자금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에 밀착한 서비스 제공 및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정책성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총괄기구의 역할은 정보수집 및 제공 등 단순한 조정역할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최저 지원금에 대한 100%를 보장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관리를 하지 않는 도덕적해이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100% 보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서민금융의 대출이 아니라 복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임.

2.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문제점과 대안

서민금융기능 독점의 문제점

서민금융의 경우 병원비, 장례비, 긴급한 생활자금 등 자금수요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대출형태를 표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으로, 일관된 금융서비스 공급 체계 보다는 분산된 공급체계가 바람직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총괄기구는 서민금융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 인프라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채무조정의 주체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채무자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고 있으나 기간, 금리 등을 조정할 뿐 채무 원금에 대한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각을 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원금탕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금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원금 탕감 등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채무불

이행자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남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으며 다중채무 등으로 인해 단일 금융기관만으로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이를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법적 채무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개인 및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조인숙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상담실장)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이자제한법 폐지 및 각종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대출남발, 고금리 대부업 횡행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결국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나며 5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수많은 채무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자살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동반자살 등의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4년 현재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나 카드남발이 판을 치고 있고 고금리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 티비에서 몇 분마다 한번 씩 보여지며 쉽고 빠른 대출이라고 유혹합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명함식 대출 광고물과 메모지식 대출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대출을 권하며 채무자를 양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채무자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며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는 인식만 팽배해지고 있고 실패한 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새 출발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가족 동반자살 뉴스가 나오고 하루 평균 자살자가 40여명에 이르며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살자가 채무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살 원인의 적지 않은 부분은 채무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시다만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만든 사적채무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탈락률은 해마다 3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표1] 신용회복제도(개인워크아웃) 연도별 탈락자 수/연도별 누적 탈락률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탈락자 수	594	20,288	61,210	63,440	45,615	28,324	20,309	18,700	20,424	12,031	290,935
누적탈락률	2.6%	8.0%	16.5%	24.8%	29.5%	30.6%	29.8%	29.5%	29.2%	29.0%	29.0%

*출처: 최재천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 금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신용회복위 답변자료 재정리, 2012.9.3.

또한 박근혜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표공약사항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은 생활비 조차 부족한 극 빈곤층에게 빚을 갚게 하는 채권회수 회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금융위의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1인당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2개월이며 1인당 평균 총 채무원금은 1,108만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입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극 빈곤층에게 약간의 감면을 해주며 빚 갚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출범 1년 반이 조금 넘는 국민행복기금의 탈락률은 17%에 달하는 5만 여명 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형편 즉, 빚을 갚을 능력이나 상황이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채권회수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던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제외하고 사적채무조정제도가 모두 채권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의 채권사 위주로 되어 있으며 채무자 입장을 대변할 구성원은 1~2석 정도에 지나지 않아 겨우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면 결국은 또 채권자 위주로 굴러갈 것이 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조직을 보면 서민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기업 ‘한국이지론’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이학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의 한국이지론의 대부중개 현황을 보면 연 34.9%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가 총 중개 건수의 68%에 이르고 금액으로 보면 전체 대출액의 70%나 됩니다.

[표2] 한국이지론 대출중개 실적

(단위 : 백만원)

업권	'10년		'11년		'12년		'13년 6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은행중개	3,841	23,327	1,195	8,647	929	6,373	801	6,927
저축중개	812	4,245	1,360	11,489	930	8,682	3,144	38,995
여전중개	1,323	9,660	1,050	10,626	952	12,161	714	9,179
대부중개	598	2,361	388	1,962	165	1,039	268	1,410
상호금융	3	15	3	24	11	87	60	478
비영리법인	-	-	-	-	-	-	6	44
합 계	6,577	39,608	3,996	32,747	2,987	28,339	4,993	57,035

*출처: 이학영의원실 보도자료 2013.10.18.

사회적 기업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고리대 중개를 해주며 서민을 채무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곳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조직에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리 대출까지 중개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고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며 나아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해서 맞춤형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제도금융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줘서 이자율을 점점 낮춰주겠다고거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분에 한해 지원 대상에 넣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른 햇살론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의 경우 이자율은 7~12%정도로 꽤 높은 이자율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율을 더 높인 후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후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채권자 위주가 아닌 중립적 위치에서 채무자에게 맞는 제대로 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채무자에게 제도를 선택할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립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채권자 위주로 되어 있는 채무조정재도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 대출, 약탈적 대출을 남발하는 채권자의 도덕적해이도 수위를 한참 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성에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채권자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나 단체와 동등하게 구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서민금융진흥원의 성격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는 하였는데 채무조정도 하고 대출도 하겠다는 것은 이해상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유되면 이해상충은 오히려 높아지고 지금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체계에서는 채권사를 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고 특히, 고리대출 중개까지 하겠다는 것은 채권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까지 보여 집니다.

▲ 셋째, 서민금융진흥원의 협약기관 가입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는 사채업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넷째, 오히려 보수화 되고 있는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 다섯째, 현재 34.9%인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적어도 20~25%정도로 인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 민생연대로 22살의 대학생이 상담전화를 해왔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친한 친구라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가진 돈은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저축은행 두 곳과 대부업체 두 곳에서 모두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이제 스물두 살 밖에 안 되는, 갚을 능력도 직업도 없는 대학생에게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 해주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까요?

이것이 돈을 빌리는 사람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은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모든 책임을 떠안고 돈을 갚고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로 노래방에 다닌다고 합니다. 이 학생에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학생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 학생은 너무 친한 친구라는 나름의 기준이라도 있었기에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책임을 지며 본인이 빚을 떠안고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사들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하게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온갖 무시무시한 추심을 해댑니다. 무분별하고 약탈적인 대출을 일삼는 채권사들의 양심적이고 엄격한 책임대출을 요구하며,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권할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몇 가지 채무조정제도나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쉽게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자들에게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1. 서민금융진흥원 독점기관화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이 독점기관이 되어 정책자금 공급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으나,

- ①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②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은 현행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 복지사업자와 민간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에게 서민금융을 지원해 나갈 계획
 - 휴면예금 전대를 통해 민간 복지사업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 등이 햇살론을 공급토록 할 계획
- ③ 특히, 향후 진흥원은 정책자금의 양적공급 보다는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 민간 금융상품 알선 등 서민형PB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이를 통해,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참고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달라지는 모습

◇ 소비자는 상담과 지원 모두 서민금융진흥원(통합 거점센터)만 상대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 (→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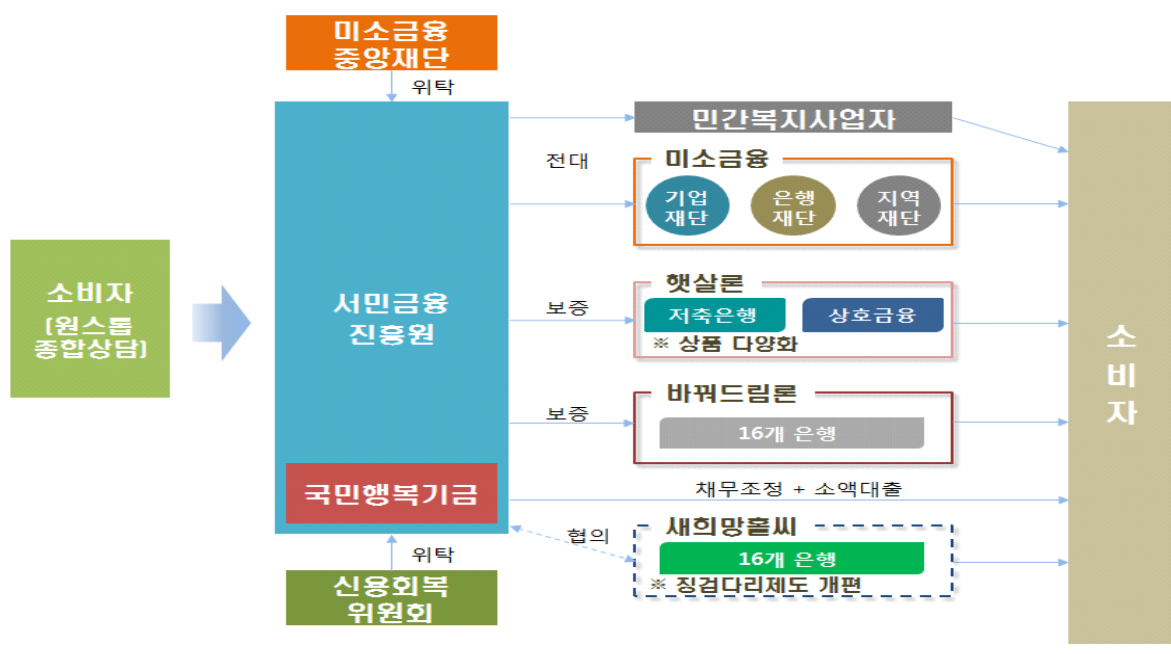
*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3개의 법인을 존치하는 것은 공급자 측면에서 다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음

※ 민간 Player는 현행 담당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

[개편전]



[개편후]



2. 채무조정과 대출간 이해상충 가능성

- ① 진흥원 자금을 통한 대출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대출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민간금융회사 대출과 같이 이해상충 여부를 논의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
- ② 수요자인 서민 입장에서는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 하나의 기관을 통해 대출, 채무조정, 종합상담,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
- ③ 사적 채무조정은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 달리 채권자 주도로 채무자와 합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 양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채무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도 채무조정 업무 기관에서 서민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 신복위·캠코가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에 대해 소액대출을 이미 수행중
- ④ 특히, 법상 휴면예금 관련 의사결정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해관계를 중립적 심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 *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는 상기 이외의 서민금융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의결

3.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성격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은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법 상 자본금을 보유한 특수법인’임
 - *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금융 관련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일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나,

- ① 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에게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 ② 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받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거나, 진흥원은 개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자료제공을 요청
- ③ 또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책목적상 비공개가 필요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제공을 법상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현행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재단)은 휴면예금 조회·지급업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어,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제31조 : 금융실명법 4조,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재단에 제출할 수 있고, 재단은 휴면예금 조회·지급업무에 이용할 수 있음

○ 법상 재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진흥원도 휴면예금 조회·지급업무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이용할 계획

* 참고로 향후 만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정보를 유출할 경우 「신용정보법」 제50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4. 신복위 법제화 이유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동안 신복위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① 신복위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한 채무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 (현행 신복위) 금융협회장 등 채권자대표 8인으로 구성

→ (법안상 신복위 구성) 진흥원 원장, 부원장, 채권자 대표 6인

+ 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 전문가 등 최대 7인 포함

② 채권자간 자율협약 형식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현재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곤란

③ 또한,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위해 법상 신복위 설치 근거 및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신복위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 사적 채무조정이 채권자 공동회수 수단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5.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등의 지배구조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관련사항은 정관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
- 현재 전부개정법(안)상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의원 5인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해 6개 기관*이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6인을 추가
 - * 법무부, 고용부, 한국소비자원, 은행연합회, 캠프, 금융위
- 현재 채권자 위주로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복위도 지배구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채권자 대표 7인 이외에 최대 8인까지 소비자(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
-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법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법령에 반영할 수 있음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안종식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서민금융기능 독점 의견에 관하여

□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 관련 기구들을 통합·관리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막고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는 것임

◦ 신설예정인 진흥원이 서민금융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신설 기구의 자금규모와 조직을 보면 이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의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며, 기존의 서민 금융기관과 경쟁하거나 서민금융을 독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하는 것 또한 채무조정을 독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복위가 법정기구가 되더라도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워크아웃은 지속될 것이며, 법원의 채무자구조 또한 신복위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채무문제 관련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직접 도와주고 있는 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적자치에 근간을 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추심에 시달리거나 도파·잠적하는 피해자에게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임.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 통합의 문제점에 관하여

□ 진흥원을 통한 대출은 영리목적의 금융회사 대출이 아닌 저소득·저신용자 등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성 대출로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음

□ 진흥원이 갖는 채권자의 지위는 신용보증 지원으로 인해 업무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과 장기연체채무 매입뿐임

→ 대출의 취급은 별도 법인인 미소금융 관련 '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미소금융 기업재단'과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수행하게 되고, 신복위 관련대출도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국한됨

□ 대출과 채무조정 간 업무의 엄격한 구분을 위해 대출은 진흥원에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의사결정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설계되어 있음

□ 현재도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조정절차를 진행중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의 대출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임

신복위가 금융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법률안은 신복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보다 중립적·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복위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을 금융계 대표와 함께 소비자권익계,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확보

□ 신복위는 채무조정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채무조정의 중재자이며 조력자에 해당

⇒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스스로의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양보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적자치가 구조화되어 작동 중

□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의 신청도 지원토록 규정

□ 아울러,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할 예정

<법률 상 채무조정 of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장치>

i)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채무자의 선택권)

ii)신복위 위원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 금융협회장 등 6명(채권자), 진흥원장·부원장(중립), 소비자권익계·변호사·교수 등 7명(채무자, 민간전문가), 총 15명 (현행은 금융업권 8명으로 구성)

iii)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체계 과제와 전망」

김준하 (희망살림 팀장)

□ 서민금융은 애초에 서민금융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으로 출발됨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비중은 28.8%, 2008년 26.8%, 2010년 20.5%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금리면에서도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30% 이상의 고금리와 사금융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영업과 채권추심에 노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됨

□ 현재도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고금리의 부담과 강압적인 채권추심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대부업법상 금리상한(2009년 49%, 현재 34.9%)이 여전히 30%이상 고금리를 용인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대출 스캠문자, 강압적인 채권추심과 민사소송 등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음
- 현행 대부업법의 금리 인하, 공정추심법의 개정을 통한 채무자보호 강화, 금융 소비자보호법, 신용소비자 보호법 등의 재정이 필요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

- 서민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에서 출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속성 확보에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영역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정부에 의한 서민금융은 자칫 수요자에게 시혜로 인식될 수 있어, 과잉공급의 문제와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업자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서민금융상품, 국민행복기금, 캠프의 일자리지원사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실무조직은 통합하고최고의사결정기구인 독립성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존치시키는 기형적 구조 자체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함.
- 실무조직의 통합 또한 현재 신복위의 직원만 35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500명 이상의 방대한 조직이 불가피함.

□ 신용공급업무와 채무조정업무의 양립

- 서민금융은 개념상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될수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분야는 공급업무와 채무조정업무의 두 축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지만 신용공급에는 필연적으로 채권회수가 수반되며 채권회수의 가장 큰 목적은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임, 결국 채무조정 역시 채권자의 관점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과다채무자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과다채무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최초 신용공급이후 대환으로 인한 양적,질적 악화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과정에 서민금융이 과다채무상태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급업무와 채무조정업무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사고시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

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불가피하게 됨.

□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율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신용회복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존의 입장은 3,600개의 협약기관으로 전체금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 오히려 협약이후 채무조정에서 자율협약으로 인해 채권금융사가 거부하면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채무조정을 거부하고 있고 실제 채권추심과정에서도 “채무조정 불가”를 내세워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과 파산은 과다채무상태이면서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적채무조정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 연체를 하지않으면 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사적채무조정이 공적채무조정에 선행되기 위해서는 연체기준 등을 개선하여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복위의 채무조정자 중에서 탈락자가 1/3이상이고 이들중 60%가 1년이내에 탈락한 것은 현재 채무조정 방식이 채무자중심이 아니라 채권자 중심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경제적 제기를 지연시키고 있음. (2013년 국감)
- 또한 통합이후 이사진 확대를 통해서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는 하지만 채무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국민행복기금 역시 이사들이 채무자를 대변하기는 쉽지 않음.

생각해 보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14년 11월 21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에듀머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희망살림, 민변 민생위원회'가 모여 발족한 네트워크입니다.

□ 대부업광고반대 시민행동을 시작으로 부실채권 소각운동, 서민금융총괄기구 재편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 욕심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운동에 사용할 기금과 물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010-6205 9263

최계연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010-9581-2339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 제안문

□ 배경 및 문제의식

◆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465조원 규모였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가계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 350조원을 더하면 1,3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계가 짊어진 것이다.

◆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데다 개별 금융기관으로선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의 파급 범위와 영향력이 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과잉 팽창과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대가 일정한 한계에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공동의 대안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게에서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왔지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해 원리금 상환에 더욱 애를 먹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말 기준으로 8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빚이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현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기 짝이없다.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은 가계부채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의 필요성

◆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문제는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단위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 영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지금은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각 영역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정보교류와 협력, 공동의 과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고 장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힘있게 밀고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에듀머니, 희망살림, 참여연대, YMCA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창립하고자 한다.

□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선정한 7대 핵심과제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우리사회의 소비자중심적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대를 통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다음 7대 핵심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

금융소비자소송의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의 도입

2.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 금리적용, 대출여부 결정됨. 신용평가 기준이 무엇이며 신용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

3. 금융소비자단체 등의 상품 사전 검증제 도입 추진

약탈적인 상품 출시,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상품의 기획과 출시 단계에서 소비자참여와 소비자피해 억제를 위한 사전적 검증제도를 강화

4. 인간적인 이자 구현

이자제한법 개정, 제한금리 25%, 모든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범위 확대

5. 채무자 인권보호

대부업법 개정, 신용소비자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리, 사적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비정한 금융 현실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6. 채무자연대로 채무자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

채무자 우호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

7.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 강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정의연대 / (사)금융소비자연맹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녹색소비자연대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에듀머니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한국YMCA전국연맹 /
희망살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